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23

발의일시: 2006. 9. 7
발 의 자: 양승모의원외 인

1. 제안이유

- 한·미 FTA는 350만 농업인구를 해체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근본을 흔들게 될 것이며,
-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가들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의 제물이 되고 노동자는 비정규직화 되어 인권과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주요내용

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미국의 자본력에 의한 농업분야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인수합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

나. 일부 재벌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나 농민들의 삶의 질이 퇴보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므로 「한·미 FTA」는 중단 되어야 한다.

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4. 붙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안)

고유가와 환율하락 내수부진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 시기에 참여정부는「한·미 FTA」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대인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토대로 '정부개입철폐, 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복지축소' 라는 미국식 자본기업가 입맛에 맞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미 FTA」1차 협상에서 그들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모든 분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면서도

광우병쇠고기·유전자 조작식품의 수입, 환경규제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며,
섬유 등 자국 취약부분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막연한 분홍빛 그림만을 보여 주며 「한·미 FTA」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한·미 FTA」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한·미 FTA」는 350만 농업인구를 해체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근본을 흔들게 될 것이며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가들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의 제물이 되고 노동자는 비정규직화 되어 인권과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미국의 자본력에 의해 농업분야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인수합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

둘째 : 일부 재벌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나 농민들의 삶의 질이 퇴보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될 것이므로 「한·미 FTA」는 중단 되어야 한다.

셋째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

2006. 9. .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의원일동